

민주당, 총선 앞두고 조직감사 ‘돌입’… 초선 의원실 ‘긴장’

정량·정성 평가 지역위원회 발등 불
민원 처리 등 서류 항목 11개 달해
현 지역위원장 최근 10개월 감사대상
총선 전 지역 활동 평가 지표 될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공직선거후보자 심사의 평가지표가 될 정기 조직감사를 예고하면서, 각 의원실과 지역위원회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두고 있는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 소속 당원들이 활동하는 협의체다. 민주당 당규 제67조는 지역위원회의 당무 전반에 대한 지역위원회 조직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감사를 활용하고 있다.

당 사무총장은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감사자료는 시도당의 사고당부 심사·판정, 공직선거후보자 심사 등 당무에 활용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공직선거후보자 심사의 평가지표가 될 정기 조직감사를 예고하면서, 각 의원실과 지역위원회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뉴시스

중앙당은 지난달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 ‘2023년 조직감사 시행’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내 조직감사 평가 지표와 지역위원회가 준비해야 할 항목들을 알렸다. 5월 10일을 전후로 약 열흘간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와 시도당 일반직 당직자 직접 지역위원회를 찾아 조직 운영 실태, 당원 관리, 홍보활동, 민원 처리 등을 점검한다. 서류 제출 항목만 11개에 달한다.

현 지역위원장 임기 중 최근 10개월이 감사대상이다. 정량평가 이외에 지역위원장(현역 의원)에 대한 지역사회 여론과 경쟁력 등을 조사하는 정성 평가도 실시한다. 특히,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로 2022년 정기 조직감사가 올해 상반기로 밀렸기 때문에 총선 전 지역 활동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평가 지표가 될 전망이다.

당무감사를 앞둔 민주당 의원실 관계

자의 반응은 담담했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직 선거 후보자 평가의 한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다. 200개가 넘는 지역위원회에 당직자들이 과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들여다 보지는 않을 수 있다.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원외 지역위원회는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특별한 건 없다. 당에서 시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요구하는 것을 다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를 다 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평소에 하던 걸 잘 정리하는 것이 일이다. 정리가 잘 돼 있는 의원실은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백날 지역에서 민원 잘 받고 회의해봤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좋은 점수 받기 쉽지 않다. 누가 잘 정리하는가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에 대선과 지선으로 조직감사를 하지 않았으니, 총선 전

에 하는 당무 감사가 더 비중이 크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초선 의원실 같은 경험이 없는 방은 낫놓고 있다가 발등에 불 떨어질 수 있다. 원외 지역위원회는 실무자가 없고 지역위원장이 국회의원도 아니니 실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에 제대로 가지 않거나, 의원의 의지와 무관하게 지역 실무자가 없어서 말도 안 되게 지역위원회 운영을 하는 의원들도 있을 수 있다. 조직감사를 정기적으로 했으면 지역에 인원을 확충하거나, 미리 자료를 잘 모아 놓았을텐데 거의 3년만에 하는 것이고 총선을 앞두고 하는 것이라서 중요성이 크다. 살생부까진 아니더라도 거의 유일한 지역위원회 평가지표가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을 평가할 때는 지역 활동과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데, 지역이 아닌 의정활동 평가는 추후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日 원전 오염수, 민간 공동조사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찰단 가서 살피는 것 의미 없어
사실조사 후 안전한지 여부 검증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의지와 관련해 한국이 시찰단을 보낼 것이 아니라 최소 민간 차원의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한국 시찰단 파견을 공식 발표한 후, 외교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전문가 시찰단을 오는 23~24일에 파견하기로 일본 측과

관련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시찰단을 보내기로 했다는데, 가서 살펴본들 무얼 하겠나.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 검증을 거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잘 흘러가나 안 가나’, ‘어떻게 방출하고 있나’, 이런 것을 지켜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제안한 것이 하나 있었다. 영향을 받는 국가들 중심으로 국가 단위의 공동조사가 어렵다면, 민간 단위라도 공동 조사를 할 수 있게 노력하자고 저희가 제안을 했다. 우

리가 후손들을 위해서, 또 지구의 환경 보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력도 계속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국내외 사안을 막론하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지 않으면 후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검증된 경험”이라며 “정보공개와 철저한 검증이 대원칙이다. 정부가 형식적 시찰단 파견을 면피 정도로 생각하면 오염수 방류 문제를 넘어서서 식품의 수입 방어선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간담회에 앞서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찰

단 파견이 후쿠시마 원전과 방류시설을 견학하는 수준에 그치고, 결국엔 원전 오염수 방류의 들러리를 서게 될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전 오염수 검증을 위해 ▲원전 오염수 검증단을 오염수 방류에 비판적인 전문가로 구성할 것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1회성 시찰이 아닌 수시로 방문 조사를 할 수 있는 약속을 받을 것 ▲원전 오염수 보관실태 및 다핵종처리설비(ALPS)에 대한 원 자료를 확보할 것 ▲안전성을 확인하기 전까지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을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과 대한민국의 바다, 수산업에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일본에 넘겨준다면 더 이상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부양은 국가 숙제… ‘가족돌봄’ 청년 맞춤형 지원 예산 약속”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단순 개인·집안의 가족문제 아니라
국가적 지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어버이날인 8일 ‘가족 돌봄’(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한 가족 돌봄) 청년들과 만나 “가족 부양은 단순한 개인이나 집안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획일적, 무조건 절금 아니라 정말 맞춤형으로 충분히 지원하는 게 국가가 해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부에 전달했고, 그 같은 현안을 풀기 위해 여러분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듣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 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가족 돌봄 청년 간담회에 참석한 가운데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를 우리 모두가 인간의 도리라 생각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하기는 버거운 많은 청년들이 주변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 민생특위인 민생119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함께 참석한 간담회에서 김 대표는 “2년 전, 언론에 ‘청년 간병살인’이라는 표현으로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나서서 ‘국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기는 했지만, 2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상태였던 것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복지사업 대상자에 가족 돌봄 청년 카테고리가 없는 점을 언급한 김 대표는 “여러분께

서 주시는 다양한 여러 가지 현장 목소리 녹여서 내년도부터 이 예산이 국가 예산에 꼭 반영돼 당장 도움이 시작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중학교 때부터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부양한 당사자가 직접 어려움도 토로했다. A씨는 “가족 돌봄 아동과 청소년, 청년은 희망적 미래를 상상하기 어렵다.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기 쉽고, 돌봄 대상자가 사망하고 나면 남은 게 없어 큰 상실감과 박탈감은 물론 사회 재진입도 어렵다”며 “돌봄과 학업, 경제활동 삼중고를 안고 있는 이들을 위한 장기적 심리상담과 의료, 간병, 교육비, 긴급콜센터 등 체계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을 시작으로 격주 1회 원칙으로 현장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與, 尹 정부 출범 1주년 ‘다시 경제다’ 사진전

미래의 돛 퍼다 등 40여 점 구성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사진전 ‘다시 경제다!’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열린 사진전은 ▲대한민국 정상화 ▲현장이 답이다 ▲따뜻한 동행 ▲미래의 돛을 퍼다 등 4개 분야 40여 점의 사진으로 구성됐다.

이날 오전 열린 사진전 개막식에는 김기현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함께했다. 개막식에 참석한 김기현 대표는 “지난 1년을 회상하고 오직 민생, 다시 경제를 잘 살리는 데 매진하는 계기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축사에서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엄청난 공격과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 기울어진 언론 속

에서 국민과의 접촉이 사실상 많이 왜곡된 실정에서도 우리나라 기초를 만들어 가는 시기였다”고 주장한 뒤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당 내부에 어려움이 있었고 갈등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도 지혜를 잘 모아 당을 잘 추슬러왔다. 안정적인 모습 속에서 당 지지율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잘한다는 그런 평가를 제대로,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말도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이날 전시회에 대해 “5월 10일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다”며 “1년 전 정권 창출의 초심을 되새김과 동시에 남은 4년의 임기 동안 오직 ‘민생’을 최우선시하며 경제 살리기와 남은 국정과제 실현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최영훈 기자